



주간통일정세 2011-01(2010.12.27~2011.01.0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0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김정은, 청년대장으로 부르지마라”(12/27,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부상한 3남 김정은에 대해 더는 ‘청년대장’ 호칭을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은 이날 “최근 중국 내 북한 공관과 무역일꾼들에게 김정은을 청년대장으로 부르지 말라는 문건이 시달됐다”고 밝힘.
 - 그는 그러면서 “이 문건은 그를 ‘존경하는 김정은 군사위부위원장’이나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로 부르도록 했다”며 “김정은이 지난 9월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고 9.28당대표자대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청년대장 호칭이 금기시됐다”고 전함.
 - 그는 “해외에서 호칭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자 공식 문건이 시달된 것 같다”고 말함.
 - 선양(瀋陽)의 한 대북 무역상도 “최근 북한 파트너를 만나 대화하던 중 청년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더니 기겁을 하며 ‘김정은 동지’나 ‘군사위 부위원장’으로 부르라고 하더라”며 “청년대장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함.
- **北김정은생일 ‘축하선물’ 열차 탈선(12/27, 열린북한방송)**
 -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생일(1월 8일) ‘축하선물’을 가득 실은 열차가 최근 평안북도 신의주역을 출발한 직후 탈선했다고 보도
 - 이 방송은 평안북도 보위부 소식통을 인용, “지난 11일께 신의주를 떠나 평양으로 향하던 화물열차가 (15km 정도 떨어진) 염주역과 동림역 사이 구간에서 탈선해 보위부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북한의 철길이 노후화하긴 했지만 철로가 대파된 점으로 미뤄 이번 사고는 열차 통과 시간에 맞춰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또 “전체 40여량 중 탈선한 8량에는 김정은의 생일을 축하하는데 쓰기 위한 시계, TV 등 선물용품이 대량 실려 있었다고 한다”면서 “김정은 후계체제에 반대하는 내부의 누군가가 이 같은 정보를 미리 알고 철로를 못쓰게 만든 것 같다”고 덧붙임.
 - 이 방송은 “평양-신의주 여객 열차는 하루 한번만 운행하지만, 화물 열차는 수송할 화물이 생기는대로 가기 때문에 운행 간격이 불규칙



하다”면서 “보위부도 김정은 후계에 불만을 품은 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함.

● **김정은, 北다큐멘터리에 등장(12/28, 유로뉴스)**

-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에 대해 “30세도 되지 않은 그가 인구 2천 400만의 ‘핵무장’ 국가를 다스릴 4성 장군이다”라고 범유럽 뉴스채널인 유로뉴스가 전함.
- 통신은 김정은이 최근 북한 국영 TV의 한 다큐멘터리에 등장했다면서 이는 그가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정권의 차기 지도자로 선택됐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전함.
- 통신은 이 다큐멘터리가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일 부자가 함께 등장한 장면을 보여주었다면서 영상을 보여주었으나 이 다큐멘터리가 북한 TV에서 언제 방영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 통신은 “전 세계가 과연 김정은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될 것인가?”, “언론매체들의 보도처럼 그가 진짜 할아버지인 김정일을 닮도록 성형수술을 한 것인가?”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문점을 던짐.
- 통신은 또 “농구를 좋아하는 셋째 아들(김정은)이 부친(김정일)과 같은 건강상 문제를 앓는가?”, “너무 어린 점, 그리고 경험이 없는 점이 그의 잠재적 지도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도 함께 던짐.
- 통신은 그러면서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몇 달 안에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유로뉴스는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러시아 등 21개국 방송사가 공동 출자, 설립한 다국적 뉴스채널임. 유럽의 ‘뉴스 허브’ 역할을 하는 방송사로 유럽에서는 CNN 인터내셔널, BBC 월드뉴스보다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음.

● **北당·군, 김정은 우상화 주도권 싸움(12/2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우상화 작업을 놓고 노동당과 군부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RFA가 전함.
- 방송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김정은에 대한 무리한 선전으로 주민들 사이에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는 당 선전선동부의 보고를 받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격노했다고 한다”면서 “(우상화 작업을 주도해온) 인민무력부 정치국과 국가안전보위부 선전부 간부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소문이 간부들 사이에 나돌고 있다”고 밝힘.
- 또 량강도 혜산시 간부는 “11월 10일 당 선전선동부가 ‘김정은 대장동지의 위대성 선전을 일체화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제출해 김 위원장의 재가를 받은 뒤로 김정은한테 ‘청년’, ‘젊은신’이란 말을 못쓰게 됐다”면서 “김정은의 후계 공식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당 선전선동부가 ‘위대성 선전 일체화’라는 구호를 앞세워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에 나선 셈인데, 권력기관 사이의 암투가 치열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함.

- 평안북도 신의주시 간부는 “12월 20일에도 김정은에 대한 위대성 선전을, 대상과 분류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면서 “내년 1~6월이 ‘김정은 위대성선전 특별기간’으로 정해져, 중앙과 지방의 관련 기관에서 학습과 토론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전함.
 - 이 간부는 이어 “김정은에 관한 학습제강(학습자료)은 반드시 당 선전선동부가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쓰도록 돼 있다”면서 “이런 학습제강은 당 총무부와 지방당 선전선동부를 거쳐 배포된다”고 덧붙임.
- **北TV 속 김정일 위원장, 왼손 사용…건강 호전?(12/30,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불편했던 왼손을 자유롭게 쓰는 장면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됨.
 - 이런 장면이 담긴 프로그램은 29일 오후 전파를 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여러 부문을 현지도하셨다’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다큐멘터리)임.
 - 9월 초순부터 11월 초순까지 2개월여 동안의 김 위원장 공개활동 내용을 편집한 이 기록영화에서 그는 한 아파트에 들러, 오른손으로 방안의 옷장 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뒤 왼손을 자연스럽게 올려 다른 쪽 문을 열었음.
 - 김 위원장이 10월 8일(조선중앙통신 10월 29일 보도) 현지도(시찰)한 이 아파트는 대동강변에 신축된 예술인 거주 아파트라고 기록영화는 밝힘.
- **쿠데타 대비, 北김정일 별장에 탱크 배치(12/31, 자유아시아방송(RFA); 자유북한방송; 데일리NK)**
- 최근 북한 량강도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별장에 지역 군부대 반란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탱크부대가 배치됐다고 RFA가 전함.
 - 이 방송은 량강도 소식통을 인용, “8월 말께 탱크 10여대가 열차에 실려 혜산시에 들어왔다가 얼마 후 (동북방 40km) 삼지연군의 김정일 위원장 특각(별장) 주변에 배치됐다”면서 “이들 탱크는 김 위원장 경호를 전담하는 호위사령부 소속인데, 량강도를 위수지역으로 하는 인민군 제10군단을 견제하는 것이 주임무”라고 말함.
 - 이 소식통은 또 “올해 기존 민간무력을 재편해 창설한 10군단에는 경장갑차가 여러 대 있지만 탱크는 소형 한 대밖에 없어, 혹시 반란이 일어나도 탱크 10대면 충분히 진압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면서 “10군단 창설 전에는 삼지연 특각에 기관총으로 무장한 장갑차 20여 대만 배치돼 있었다”고 말함.
 - 한편 자유북한방송은 27일 “량강도 혜산시와 인근 보천군에 8월부터 탱크 부대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면서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경우 인민보안서(경찰) 타격대와 함께 진압작전을 벌이기 위해 탱크 부대를 배치한 것 같다”고 전함.

- 또 데일리NK는 지난 15일 “북한의 여러 도(道) 가운데 유일하게 정규군이 없었던 량강도에 인민군 제10군단이 창설됐고, 그 사령부가 혜산시 춘동에 들어섰다”고 밝힘.

● **北김정일, 탱크부대 훈련 보며 올해 마감(12/31,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자신의 ‘선군혁명 영도’를 상징하는 탱크부대를 시찰하고 훈련상황을 지켜봄.
- 통신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오중흡7련대’(항일 빨치산부대) 칭호를 받은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의 군사훈련을 보셨다”면서 “모든 군인들이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할 수 있게 정치사상적, 군사적, 육체적 용사들로 자라난데 큰 만족을 표시하셨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은 또 “조선 땅크무력의 발전에 원종장(종자배양소) 역할을 한 류경수105땅크사단은 싸움과 사상에서 모두 근위부대였다”면서 “이 투쟁전통을 살려 언제나 근위병의 영예를 떨쳐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뒤 훈련에 참가한 군인들과 기념촬영을 함.
- 방송은 별건 보도에서 “용감한 땅크병들이 멸적의 투지를 안고 공화국기를 날리며 험한 산과 깊은 강물을 단숨에 헤쳐나갔다”면서 “육중한 땅크들의 눈부신 기동과 협공, 능숙한 사격술은 우리 땅크병들에게 극복 못할 산악도, 점령 못할 요새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훈련상황을 전함.
- 방송은 또 김 위원장의 탱크부대 시찰 날짜를 ‘12월 마감일(31일)’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음.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루 이상 늦춰 전하는 것이 북한 매체의 관행임.
- 한편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8시 보도에서 김 위원장이 탱크부대의 훈련상황을 참관하는 사진을 내보냄.
-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영호(군 총참모장 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들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박도춘(당 비서)·주규창(당 기계공업부장), 당 중앙군사위 위원들인 김경옥(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김원홍(보위사령관)·김명국(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국방위 국장들인 현철해(인민군 대장)·리명수()가 수행

● **北김정일, 구랍31일 탱크훈련 보고 신년음악회로(1/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구랍 31일 당·군 고위 간부들과 함께 은하수관현악단의 신년 경축음악회를 관람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음악회를 본 뒤 “승리의 대문이 펼쳐지고 있는 역사적 시기에 혁명의 총진군에 박차를 가해 2011년을 조국청사에 영원히



새겨질 승리의 한해로 빛내자”고 말함.

-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최영림(내각 총리)·리영호(군 총참모장 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당 정치국 위원인 김영춘(인민무력부장)·전병호(내각 정치국장)·김국태(당 검열위원장)·김기남(당비서)·최태복()·홍석형()·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리용무(국방위 부위원장)·김경희(당 경공업부장)·강석주(내각 부총리)·변영립(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주상성(인민보안부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김양건(당 비서)·김영일()·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문경덕(당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리태남(내각 부총리)·김락희()·주규창(당 기계공업부장)·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김창섭(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동행

■ 김정일동향

- 12/28 김정일, 인민군대 원호사업 등에 모범을 보인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12/28, 중방)
- 12/31 김정일,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훈련 참관(12/31, 중통·중방)
 - 리영호, 장성택, 박도춘, 주규창, 김경옥, 김원홍, 김명국, 현철해, 리명수 수행
- 12/31 김정일, 은하수관현악단의 신년경축음악회 관람(1/1, 중통)
 - 김정은, 김영남, 최영림, 리영호,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홍석형, 양형섭, 리용무, 김경희, 강석주, 변영립, 주상성, 장성택,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룡해,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리태남, 김락희, 주규창, 우동측, 김창섭, 오극렬 수행

■ 김정은동향

- 12/31 김정일, 은하수관현악단의 신년경축음악회 관람(1/1, 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저작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발표(12.28) 21돌 즈음 김정일의 “수령, 당, 군대, 인민의 혼연일체 일심단결 실현 등 선군정치 영도력” 찬양(12/28, 평방)
- 김일성 국가주석 추대(1972.12.28) 38돌 즈음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사, 주체사상 창시, 강성대국건설 등 생애 혁명업적” 소개, 찬양



- (12/28, 중TV·평방)
- 김정일의 올해 1월 발전소건설장 등 20여개, 12월 평양의 경공업과 함흥 등 30여개 단위, 희천발전소건설장 4회 현지지도 등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총공세 진두지휘, 철야강행군 노고” 찬양(12/29, 중통)
 - 김정일의 先軍정치는 “조선반도 평화수호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해 나가는 위력한 보검”이라고 煽動(12/30, 노동신문)
 - 김정일의 올해 인민경제부문 현지지도(희천발전소, 대동강종합과수농장, 대계도간석지 등)들 실적 및 訪中 업적 등을 회고하며 “全黨·全軍·全민이 총진군을 더욱 과감히 다그쳐 ‘강성대국 선포의 날’을 앞당겨오자”고 煽動(12/30, 민주조선 정론)

나. 경제

- “北·中 잇는 신압록강대교 연내 착공식”(12/27,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지지부진했던 신의주와 단둥(丹東)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착공식을 연내에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단둥의 한 소식통은 “지난주 중국 중앙정부에서 해를 넘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 랴오닝성과 단둥시 정부가 급하게 착공식 날짜를 조정하고 있다”며 “30일이나 31일이 유력하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착공식을 해도 동절기라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이나 가능하다”며 “서둘러 착공식을 하는 이유는 북한과 중국 모두 신압록강대교 건설 의지가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말함.
 - 선양의 한 중국 소식통도 “연내에 단둥에서 착공식이 열린다”고 확인하면서 “양국 중앙의 부장급 간부와 랴오닝성과 신의주 최고 지도부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내년 초로 예정돼 있었으나 갑자기 앞당겨졌다”며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상징적 의미”이라고 설명
- 北·中, 내년 라진·황금평 합작개발 시작(12/29,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내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라선시 경제특구에 대한 합작개발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는 최근 베이징에서 라선지구의 부두·도로·정유시설을 합작 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베이징의 소식통들이 29일 밝힘.
 - 소식통들은 북한은 35억달러를 들여 5년간 추진될 이 합작개발을 위해 토지와 인력 등을 제공하고 중국 측이 자금을 투자한다고 말함.
 - MOU에 따르면 라선지구의 부두·도로·정유시설(승리화학) 등을 합작으로 건설하고 이어 무산철광석의 채광 시설을 현대화한다는 것임.



- 북·중간 라선지구 합작개발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5월 방중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했으며, 북한은 이에따라 지난 7월 이를 추진할 전담기구인 조선합영투자위원회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짐.

● 北·中, 수풍발전소 개조공사 한창(12/29, 신화통신)

- 북한과 중국의 공유 하천인 압록강에 세워진 수풍발전소(발전용량 약 80만kW)의 개조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짐.
- 북·중 양측은 28일 노후된 수풍발전소를 개조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이 발전소 보조댐 위에 건설된 교량을 폭발시켰다고 통신이 보도
- 북·중 양측은 압록강의 홍수방지 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지난 2009년 8월15일 수풍발전소의 댐들과 수문들에 대한 개조공사에 착수, 오는 2012년 완공할 계획임.

● 신의주-단둥 신압록강대교 착공식(12/31,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의 최대 교역 거점인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착공식이 이날 오전 11시 단둥 랑터우에서 열림.
- 지난해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 당시 양국이 건설에 합의한 지 1년 2개월 만임.
- 착공식은 양국 고위직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공안이 행사장 주변 도로를 봉쇄, 일반인의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등 삼엄한 경비를 펼친 가운데 15분간 진행됨.
- 총사업비 17억 위안을 들여 3년 뒤 완공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신압록강대교는 기존 압록강 철교에서 8km가량 하류에 건설돼 신의주 남부와 단둥 신도시가 들어서는 랑터우를 연결하게 됨.
- 교량 건설 예정지에 최근 세워진 안내판에는 이 다리가 신의주 남쪽에 위치한 삼교천(三橋川)의 장서(長西)와 단둥을 잇게 된다고 소개
- 이 다리가 완공되면 1911년 건설돼 노후한 탓에 20t 이상 화물차량은 통행하지 못하고 단선으로만 운행되는 기존의 압록강철교를 대체하게 돼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신의주와 단둥 간 무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2007년 초 북한을 방문한 우다웨이(武大偉) 당시 외교부 부부장을 통해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처음으로 공식 제의했으며 지난해 10월 원 부총리의 방북 때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냄.



■ 기타 (대내 경제)

- 黃北 사리원시·곡산군 등의 농업근로자들, 2011년 농사준비(거름 생산 1.3배, 소식회석 생산 1.2배 향상)에서 성과 이룩(12/27, 노동신문)
-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1호발전소 조기 조업(12/29, 평방)

다. 군사

● 北, 량강도 국경지역에 탱크부대 배치…폭동진압용?(12/27, 자유북한방송)

- 민간무력이 방위해 온 북한 량강도 지역에 인민군 탱크 부대들이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방송이 이날 전함.
- 이 방송은 혜산시 주민 박모씨의 전언을 인용, “최근 혜산시 춘동에 대대급 탱크부대가 들어왔고, 앞서 인근 보천군 대진리에도 2개 중대 규모의 탱크부대 선발대가 들어와 주둔하고 있다”면서 “8월과 11월에 이어 들어온 이들 탱크부대는 폭동 발발시 인민보안서(경찰) 타격대와 함께 진압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배치된 것 같다”고 밝힘.
- 박씨는 이어 “보천군에 진주한 탱크부대 장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서 “탱크부대가 나타나자 국경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임.

● 북한군 전방사단 병력 ‘얼룩무늬군복’ 착용(12/28, 연합뉴스)

- 군당국이 최근 북한군의 전방사단 병력 중 일부가 국군과 같은 얼룩무늬 군복을 착용한 것을 식별한 것으로 알려짐.
-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군 전방사단의 병력들이 얼룩무늬 군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이 올해 처음으로 식별됐다”면서 “전방의 특수전 병력들이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기습 침투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 北특수부대, 서해5도 기습점령 가상훈련(12/3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해군 특수부대가 12월 중순부터 남포 인근 초도 앞바다에서 ‘서해5도 점령’ 가상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RFA가 이날 전함.
- 이 방송은 ‘북한군 사정에 밝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 인민군 해군사령부 소속 29해상저격여단과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이 남포 앞바다에서 합동 상륙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함.
- 이 대북 소식통은 “연평도 포격에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남한의 기를 꺾기 위해 북한군 특수부대가 서해5도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최근 평양에 갔을 때 북한군 관계자한테 직접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RFA에 말함.



- 이 소식통은 또 “김정일·김정은 부자가 직접 지시한 이 훈련의 목적은 유사시 경찰총국, 서해함대 사령부, 4군단 소속 특수부대가 합동으로 서해5도를 점령하는 것”이라면서 “서해5도를 기습 점령해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으면 한·미 연합군이 쉽게 반격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 같다”고 덧붙임.
- 한편 RFA는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을 인용, “북한군이 12월초 동계훈련에 들어갔고, 내년 1월 초부터는 서해함대 사령부 소속 29해상저격여단이 공격하고 4군단이 방어하는 가상훈련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힘.

● **北, 고된 훈련과 배고픔에 탈영병 속출(1/1, 자유아시아방송(RFA))**

-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 인민군에서 연일 강도높은 훈련과 비상경계가 이어진데다 식량마저 턱없이 적게 공급되자 부대마다 탈영병이 속출하고 있다고 RFA는 전함.
- 이 방송은 량강도 내 한 사령부 소속 군인의 말을 인용, “고된 훈련과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탈영하는 병사가 속출하고 있지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처벌하기도 어렵다”면서 “상부에 10명으로 보고하면 실제로는 50명이 달아났을 정도로 탈영병이 많아 각 부대 군관(장교)들은 이들을 잡아들이느라 정신이 없을 지경”이라고 밝힘.
- 함경북도의 한 ‘국경경비대 소대장’은 또 “군단 사령관 회의에서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김정은이 ‘평화시에도 탈영하는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싸우겠느냐. 실력없는 지휘관은 모두 자리를 내놓으라’며 격노했다고 한다”면서 “그후 김정은의 지시로 협동농장의 군인 부식물 지원사업 등 탈영병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RFA에 말함.
- 이 소대장은 이어 “김정은이 주재하고 군단 정치위원도 참석한 이 회의에서, 10월 중순부터 진행된 인민군 총정치국 검열 결과가 보고됐다”면서 “능력없는 부대 지휘관 문제와 탈영병 문제는 별도 안건으로 토의됐다”라고 설명함.

라. 사회·문화

● **北, 2008년 인구 2천405만2천명(12/27, 교도통신)**

- 북한의 인구가 2008년 현재 2천405만2천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 통신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발행한 올해 연감을 인용, 북한의 2008년 현재 인구가 2천405만2천명이라고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유엔인구기금과 공동으로 실시한 북한 인구조사 결과 북한의 2008년 10월1일 현재 인구가 2천4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고 교도통신이 덧붙임.



- 北국경경비대, 버젓이 마약밀매·인신매매 가담(12/28, NK지식연대)

 - 북한의 국경경비대 병사들이 마약밀거래, 인신매매에 가담하거나 돈을 받고 탈북 주민을 방조하는 사례가 잇따라 군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NK지식연대가 전함.
 - 이 단체는 북한 현지소식통을 인용, “국경경비대의 군관(장교)과 사관(고참병) 상당수는 밀수꾼들과 손잡고 인신매매, 마약밀매를 벌이는가 하면 돈을 받고 주민들의 탈북을 눈감아주는 등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비상경계령이 떨어진 지난 21일에도 회령 주민 여러 명이 경비대의 보호 아래 두만강을 건넜다가 중국 변방대에 붙잡혀 북송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회령 지역에서는 또 보위부 군관이 돈을 받고 감시카메라 파일에서 탈북 장면을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최근 국경경비대 27여단 지휘부의 동계훈련 점호 결과, 절반 이상의 사관들이 휴가를 가거나 군의소에 입원중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고 덧붙임.

- 北, 평양서도 구제역 발생(12/28, 연합뉴스)

 - 북한 평양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일본 내 대북 인권단체인 ‘구출하자, 북한 민주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의 이영화 대표는 이날 익명의 북한 내 소식통이 평양시 강동군 구빈리에서 구제역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함.
 - 이 대표는 “최근 구빈리에 구제역이 퍼져 소·돼지가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 요원’이 확인했다”며 “확인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평양시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지역에서도 구제역이 퍼지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함.

- 北, 식량난으로 군량미 부족분 다시 거둬(12/29, 좋은벗들)

 - 노동당이 지난 10월 말 농민들을 대상으로 ‘군량미’(군용식량) 부족분을 충당하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이같은 조치를 번복한 것으로 전해짐.
 - ‘좋은벗들’은 이날 소식지에서 “12월에도 식량이 좀처럼 풀리지 않자 인민군대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부족한 군량미를 추가로 거두는 지역 군부대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중앙당에서도 군량미를 최우선 보장하라는 지시문을 각 지방당에 내려보냈다”고 말함.
 -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1월 8일 소식지에서 “중앙당이 10월 30일 군량미 사업과 군대 원호 고기 부담(군대에 보낼 고기를 감자로 계산해 바치는 것)을 올해부터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농민들이 환호했다”고 전함.
 - 이 단체는 북한의 현재 식량사정에 대해 “강원도와 황해남·북도에 주둔한 부대의 경우 군인 1명당 하루 500g도 지급하지 못하고, 그 내용도 약간의 쌀을 섞은 옥수수밥에 소금배춧국이 전부라서 영양



실조자가 많다”고 말함.

- 함경북도 도당 간부는 이 단체에 “민심을 얻기 위해 주민들에게 군량미를 걷는 대신 당 자금으로 중국에서 군량미를 들여오려고 하다 물거품이 된 것 같다”면서 “해외무역대표부와 외화별이회사들에 대규모 식량 매입을 지시해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말함.
- 그는 이어 “왜냐하면 북한의 수출품목이 광산자원을 비롯한 몇가지에 한정된데다 선불 능력이 없으면 외국회사들이 좀처럼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임.
- 한편 단체는 “평양시 국영상점과 수매상점의 경우 다른 물건은 많지만 식량만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지난 11월에 한 달 전량이 아닌 보름 분량만 우선 공급됐고, 이달 들어서도 지난달에 밀린 보름 분량만 공급된 상태”라고 전함.

● 北, 회령서 중앙방송 수신설비 도난(12/30, 산케이신문)

- 북한의 북단인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지난달 핵심 선전매체인 조선중앙방송의 TV 수신 설비가 통째로 사라져 비밀경찰 뿐 아니라 국방위원회가 직접 범인 색출에 나섰다
- 산케이신문이 보도
- 신문은 북한과 중국 국경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중순 회령시 유선역 부근에 있는 조선중앙방송의 TV 수신 중계기지에서 핵심설비인 수신장치가 사라져, 누군가가 통째로 뜯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당국은 중대사건으로 보고 비밀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 뿐 아니라 김 국방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가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짐.
- 회령시의 방송 수신 중계기지는 평양 등에 있는 방송국에서 전파와 케이블 등을 통해 보낸 방송신호를 수신해 증폭한뒤 전파와 유선으로 전송하는 시설이어서, 이 시설이 없으면 중계기지 담당지역 일대에 방송이 모두 끊김.

2. 대외정세

가. 일반

■ 기타 (대외 일반)

- 알제리대통령, 12/24 새해 즈음 김정일에게 보내는 선물 駟中 北대 사에게 전달(12/27, 중방)
- 미국의 “군비증강과 현대화, 미사일방위체계수립 등 무장장비현대화 책동은 세계적인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 국제정세를 긴장시키는 反평화적 행위”라고 주장(12/28, 중통·민주조선)



- ‘김영재’ 러시아 駐在 北 대사, 12/23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9돌과 김정숙 생일 93돌 즈음 自國 대사관에서 연회 개최(12/28, 중방)
- 北 『조선중앙통신사』, 일본의 ‘北行 비행기에 대한 화물검사훈련’ 실시는 “해외군사작전 수행으로 한걸음 더 나아간 군사대국화 책동의 일환이며, 그 직접적 대상은 우리(北)”라고 비난 ‘논평’ 발표(12/29, 중통)
- 北,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농축공장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다”고 再次 확인 및 “미국의 경수로 제공 不履行 비난과 핵에너지 이용권리가 있다”고 강변(12/29, 중통·평방)
- 中 ‘호금도’ 국가 주식과 ‘운가보’ 국무원 총리, 김정일에게 2011년 새해 즈음 「연하장」전달(12/30, 중방)
- 김혁철 에티오피아 駐在 北 대사, 12/23 駐在國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출(12/30, 중통)
- 미국의 反테러전(아프카니스탄·이라크戰)은 “세계에 대한 패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감행한 실패한 전략,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라고 嘲笑(12/30, 중통·중방·노동신문)
- 駐北 中대사 ‘유홍재’, 12/30 새해 즈음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연회 개최(12/30, 중통)
- 駐北 무관단, 12/30 새해 즈음 김정일에게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전달(12/30중통)

나. 6자회담(북핵)

- 北신문, “우라늄농축 원심분리기 수 천대 정상 가동”(12/29, 노동신문)
 - 신문은 “수천대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우라늄 농축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통한 핵 이용은 정당한 권리라고 거듭 주장
 - 또한 ‘신의없는 행위, 응당한 귀결’이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경수로 건설과 그 연료 보장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우라늄 농축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 인민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이어 “주체적인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해 자체 자원과 기술에 의거해 자립적인 경수로 건설로 나가는 것은 평화적인 핵활동 권리로 보나, 국제적인 핵에너지 개발·이용 추세로 보나, 날로 높아지는 나라의 전력수요로 보나 응당한 것”이라고 주장
 - 또 “우리의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 농축공장 가동은 경수로 제공 약속을 꺾어버린(뺏개쳐버린) 미국의 행위에 따른 귀결”이라면서 “미국이 1994년 조·미(북미)기본합의문의 공약을 지켰더라면 조선반도 핵문제가 지금처럼 복잡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변함.



3. 대남정세

● 연평도포격 때 인민군 5명 사망(12/28, 열린북한방송)

-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우리 군의 대응 포격으로 사망한 북한 군인 5명에게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지시했다고 방송이 이날 전함.
- 이 방송은 함경북도 회령의 소식통을 인용, “연평도 전투에서 북한 군인 5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인민군 부대 내에 발표됐다”면서 “그들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라는 김정은의 지시 내용에 대한 강연이 2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이어 “이런 사실은 군부대 내에만 알려져 일반주민들은 잘 모른다”면서 “전체 사망자수는 발표되지 않아, 영웅칭호를 받은 5명 외에 사망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또 “영웅칭호를 김정은의 이름으로 수여한 것도 눈길을 끈다”면서 “군대 내에서는 연평도 포격을 김정은이 직접 지휘했고, 그가 실제로 군을 통치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임.
- 이 소식통은 “군부대 강연에서는 사망한 군인들의 희생정신을 본받고 김정은 대장동지의 영도에 따라 인민군의 위력을 과시하자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모든 인민군 부대들은 현재도 총참모부의 지시에 따라 연말행사를 미룬채 초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함.

● 北매체, “국방백서 적 표현은 선전포고”(12/29,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 “동족인 우리에게 대한 공공연한 대결선동이며 북침전쟁도발의 전주곡”이라고 비난함.
- 매체는 “남조선 괴뢰군부가 그 무슨 ‘북에 강력한 경고메세지를 전달하고 군의 확고한 대적관을 표명하기 위한것’이니 뭐니 하고 떠벌이며 우리를 ‘적’이라고 ‘2010년 국방백서’에 다시 쪼아박는 망동을 부렸다”며 “‘주적’개념의 부활은 명백히 우리에게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주장
- 이 매체는 이어 “조선반도에는 사소한 사건도 순식간에 군사적 충돌과 전면전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북남사이에 군사적 긴장과 대결상태가 극도에 이른 때에 ‘국방백서’에 또다시 우리를 ‘변함없는 적’으로 쪼아박은 것은 결코 무심히 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함.
- 또 “괴뢰 호전광들은 동족대결책동이 가져올 파국적 후과에 대해 똑바로 알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함.



- 北, 통일부 새해 업무계획 ‘흡수통일 선언’ 비난(12/29,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통일부가 2011년 업무계획과 관련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대북)와 바른 남북관계 정립(남북), 통일에 대한 준비(대내)를 3대 추진목표로 설정한 데 대해 “내년도 업무계획의 초점을 ‘바른 통일준비’에 맞추고 2011년을 그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
 - 이 매체는 ‘무엇을 노린 바른 통일준비의 원년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괴뢰통일부가 ‘바른 통일준비의 원년’이란 것을 들고 나왔다”며 “이것은 지금까지 강행해온 북남관계 파탄책동에 기초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야망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집권보수패당의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주장

- 北, 남측 단체·개인에 연하장 발송(12/30, 연합뉴스)
 - 북한이 연말을 맞아 남측 단체와 일부 개인에게 연하장을 무더기로 발송해 6.15·10.4선언 이행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산하 본부, 범민련, 한총련, 민화협, 우리겨레하나되기, 인천시, 강원도 등 단체 30여 곳과 개인 10여 명 등 이날 현재 총 50여 곳에 연하장 팩스를 발송함.
 - 북한은 연하장에서 “새해에도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활동에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 북측으로부터 연하장을 받은 50여 곳 가운데 33곳이 이날 현재까지 통일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짐.

- 北신문, “바른 통일준비”는 개꿈” 비난(12/31, 노동신문; 민주조선)
 - 노동신문은 ‘바른 통일준비’에 역점을 둔 통일부의 새해 업무계획과 관련, “북남관계 파국과 조선반도 정세 악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면서 “남조선 집권세력은 대화와 평화를 위한 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
 - 이날 신문은 ‘개꿈을 꾸지 말라’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바른 통일준비’를 들고나온 것은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을 명백히 거부한 표현이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배치되는 반민족적 체제 통일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함.
 - 이 논평은 또 “바른 통일준비’의 내용은 그 누구의 ‘내부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 나서 유도한다는 것”이라며 “보수패당은 허황한 ‘급변사태’를 떠벌이며 그 누구의 ‘변화’를 망상했지만 이제는 주도적으로 실현하려고 덤비고 있다”고 비난
 - 논평은 이어 “체제통일 야망은 하늘땅이 천백번 뒤집혀도 실현될 수 없는 개꿈”이라며 “공화국 체제를 건드리며 망상을 추구하는 도발 행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함.



- 민주조선도 이날 ‘돈끼호테식 망상’이란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통일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는 동족대결 전쟁책동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을 내외에 공식선포한 것”이라며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원색적으로 비난

● 北공동사설 “남북 대결상태 해소해야”(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일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간 대결상태 해소를 강조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임.
- 공동사설은 “북남 사이의 대결 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하기 위해 남조선 당국은 반통일적인 동족대결 정책을 철회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면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공동사설은 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과 의지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국 등 특정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음.
- 이 사설은 노동신문(당보)·조선인민군(군보)·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 3개지에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으로 동시에 실림.
- 사설은 그러나 “전군이 긴장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투훈련을 실천과 같이 벌여 군인들을 싸움꾼으로 준비시켜야 한다”면서 “인민군대는 주체적인 전쟁관점과 멸적의 투지를 안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해야 한다”고 밝혀 군사적 긴장은 늦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
- 또 경제 분야와 관련, “경공업에 대한 전사회적, 전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이 부문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자재와 자금을 원만히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경공업 부문을 ‘주공전선’으로 설정할 것임을 강조함.
- 사설은 이어 농업부문을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생명선’으로 규정,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리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자를 영농공정에 앞세워 우선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함.
- 아울러 “정치와 군사,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당의 영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각급 당 조직은 주체사상, 선군사상 교양을 일관성 있게 강도높이 벌여 우리식 사회주의 사상 진지를 다져가야 한다”고 밝혀 올해 주민 사상교양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

● 北, 대화강조…南당국 정책전환 관건(1/2, 조선신보)

- 신보는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남한 당국의 정책전환이 앞으로 관건이라고 밝힘.



- ‘대문을 향한 전면공세’라는 글에서 “조선(북한)이 공동사설을 통해 북남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밝힌 조건에서 남조선 당국의 정책전환 여부가 관건적 문제로 나서게 됐다”면서 “공동사설은 당면한 정치군사적 과제로서 ▲북남대결의 해소 ▲전쟁방지와 평화수호 ▲대화·협력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들었고 여기서 공동보조의 대상은 남조선 당국”이라고 주장
- 이어 “2011년은 국제무대에서 조선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외교적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구현해 북과 남이 겨레의 이익에 맞게 정세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조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
- 조선신보는 “공동사설도 지적하듯 오늘의 긴장된 정세는 인민군대가 ‘주체적인 전쟁관점’을 안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편에서는 서해포격전으로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모순이 표출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과 평화’의 주제가 부각됐다”고 밝혀 올해에도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

■ 기타 (대남)

- 李大통령의 ‘北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對北발언(최상의 안보는 단합된 힘, 서해5도 군사요새화 등)을 ”외세와의 군사적 결탁 강화, 對北 적대의식을 고취하는 도발행위“라고 持續 비난(12/27, 노동신문)
- 우리軍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12/20)·합동화력훈련(12/23)을 “韓·美의 위험한 공모결탁의 산물”로 持續 비난하며 “북의 평화수호 의지와 자제력을 오관하지 말라”고 위협(12/27, 중통·노동신문)
- 韓·美 FTA 再협상 타결 관련 “親美 사대적 근성의 발현, 극도에 이른 對美굴종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再次 비난(12/27, 평방)
-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관련 “民意의 전당이라는 南 국회는 의원들의 치열한 싸움터, 난장판이라고 조소(12/28, 중방)
- 現 NLL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유령선”으로 이는 “군사적 충돌과 전쟁재발을 불어오기 마련”이라고 위협과 ‘북방한계선’ 否認 및 철회 持續 주장(12/28, 중통·노동신문)
- 우리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청와대와 지자체, 與野 간 대립과 마찰이 격화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선동(12/29, 평방)
- ‘2010 경찰백서’와 서울시 통계를 인용,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각종 강력범죄 증가추세와 일선 경찰의 ‘일부 가혹행위, 실적주의’ 嘲笑와 反정부투쟁 선동(12/29, 중방)
- 北, 휴전선 부근 콘크리트 장벽은 “민족의 통일과 발전을 가로막는 원한의 장벽”이라며 “즉각적인 해체” 주장(12/30, 중통·노동신문)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김외교 “6자재개 협의, 한·미·일·러 의견접근”(12/30)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북핵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참가국간 협의에 대해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고 중국과는 여건 조성에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 김 장관은 이날 YTN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공감하고 있고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데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사이에 (대북정책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다.
- 김 장관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변국들과 공조하면서 긴밀히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그런 징후가 드러나면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현재로서 구체적인 징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외교부 “대화 열려도 비핵화 진전 보장돼야”(12/30)

-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30일 북핵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 “단지 대화를 위한 대화는 곤란하고 대화가 열리더라도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보장돼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6자회담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6자회담에 참석하는 개별국가들의 진정성과 투명한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 대변인은 또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1차적인 목표로 협의를 해나가는 메커니즘이지만 금년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이 있었다”면서 “이런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그는 그러면서 “현재 정부로서는 그동안 유지해온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해 보다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국들과의 협의, 접촉을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 日 “北 ‘IAEA 사찰단 수용’은 형식적” < NHK > (12/29)
 - 북한이 최근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를 통해 밝힌 ‘국제 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수용’ 의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1회에 한정된 형식적 방문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낮게 평가했다고 NHK가 29일 보도했음.
 -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외교 루트를 통해 조사한 결과 북한의 정확한 발언은 “(IAEA 사찰단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영변에 ‘초대’하는 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음. 한국과 미국, 일본이 모종의 양보를 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IAEA 사찰단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고 있음.
 - 특히 일본 정부는 ‘초대’라는 표현과 관련해 “1회에 한정된 형식적인 방문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이를 근거로 중국 정부가 제기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 모임에 당분간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 또 일본 정부는 북한이 리처드슨 주지사를 통해 밝힌 ‘사용 후 핵연료봉 판매’ 의사에 대해서도 “(북한이) 상식적인 거래 가격의 5배에 이르는 7천만 달러를 제시하는 등 사실상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NHK와 인터뷰에서 “북측이 변화구를 던졌다고 생각한다”며 “공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며,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더라도 스트라이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李대통령 “북핵폐기, 6자회담통해 달성해야” (12/29)
 -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해 북한의 핵 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외교통상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6자회담을 통해서 하지만 남북이 또한 협상을 통해 핵 폐기하는 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음.
 - 이와 관련, 정부가 여전히 6자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핵 프로그램 중단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연평도 도발 이후 이 대통령이 연일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회담재개를 위한 변화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옴.
 - 이 대통령은 또 북핵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 통일에 대한 외교적 지지기반 확보를 외교통상부의 ‘3대 역할’로 제시했음. 이 대통령은 “동맹국인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할 것 없이 많은 나라로부터 평화적 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얻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음.
 - 특히 이 대통령은 “북·중·러와 한·미·일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한반도 통일준비와 평화정착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우



방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과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과)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올해 6.25전쟁 발발 60년이 됐지만 바로 그 해에 우리가 두 번씩이나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당했다”면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중요한 과제이고 이것은 반드시 외교로만은 될 수 없고, 강한 국방력과 국민의 단합된 안보의식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교라는 업무가 과거 시대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전통적 직업 외교관 가지고는 될 수 없으며 많은 경험을 가진 민간인도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진국에 일등 외교관이 가고 신흥국이나 자원을 가진 후진국에는 훨씬 적은 인원을 갖고 일한다. 힘들지만 필요한 곳에 우수한 외교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일본이 이미 지난 1970년대에 아프리카에 진출했던 것을 언급하며 “내년에 중점적으로 개척해야 하는 곳은 아프리카와 남미로서 외교통상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목표를 세우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 또 “올해는 공정사회라는 기치 아래서 가장 먼저 외교부의 인사문제가 대두됐다”면서 “내년 한 해는 획기적 인력배치나 인사방향을 재정립하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외교부 개혁을 주문했다.

● 北신문 “우라늄농축 원심분리기 수천대 정상 가동”(12/29)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수천대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우라늄 농축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통한 핵 이용은 정당한 권리라고 거듭 주장했다.
- 이 신문은 ‘신의없는 행위, 응당한 귀결’이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경수로 건설과 그 연료 보장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우라늄 농축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 인민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 신문은 이어 “주체적인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해 자체 자원과 기술에 의거해 자립적인 경수로 건설로 나가는 것은 평화적인 핵활동 권리로 보나, 국제적인 핵에너지 개발·이용 추세로 보나, 날로 높아지는 나라의 전력수요로 보나 응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 신문은 또 “우리의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 농축공장 가동은 경수로 제공 약속을 꺾버린(뺏개쳐버린) 미국의 행위에 따른 귀결”이라면서 “미국이 1994년 조·미(북미)기본합의문의 공약을 지켰더라면 조선반도 핵문제가 지금처럼 복잡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 페리 美 前국방 “北, 年 핵무기 1개 제조능력”(12/29)

-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북한이 연간 우라늄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문이 29일 보도했음. 신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페리 전 국방장관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 신문에 따르면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스스로 공개한 약 2천대의 원심분리기를 활용한 우라늄 농축과 관련 “고농축 우라늄 (HEU) 형의 원폭 제조에 특화할 경우 연간 1개 정도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와 관련, 일정한 냉각 기간이 지난후 미국은 북한에 특사파견을 포함한 고위급 협의를 위해 일본, 한국과 공조하면서 외교교섭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음.
- 그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과 관련 “현 단계에서는 민생용의 전력 공급을 위한 경수로 건설이 목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핵 관련 시설로 영변 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음.
- 페리 전 국방장관은 향후 미국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연평도 포격 등으로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우선은 경제제재와 합동 군사 훈련 등을 통해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다음 단계로 포괄적인 정책 재검토를 거쳐 한국, 일본과 정책을 조율하면서 고위급 협의 단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말했음.
- 그는 향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특사 후보로 2000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을 거명했음.

나. 미·북 관계

● 리처드슨 “北 시험해봐야..대화할 때”(12/30)

-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는 29일 “북한이 한 말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북한을 시험해 봐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음.
- 이달 중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금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음. 그는 “(지금)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할 시기”라면서 “긴장이 여전히 매우 높지만, 긴장이 꽤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6자회담을 통한 북핵폐기 방침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 “매우 좋은 신호”라고 환영하고, 한국군 훈련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대응 ‘자제’ 등을 거론하면서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음.
- 그는 또 북한 군부인사 등과의 면담에서 북한 관리들이 좀 더 실용적이고, 온건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이는 북한의 공격적 행동과 핵무기 능력 증대가 자신들을 고립시킬 뿐이라는 것



을 북한 관리들이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그는 자신의 방북이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자평하면서 북한이 유엔 사찰관의 입국 및 핵발전시설 방문을 허용하고, 사용전 연료봉을 거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에게 밝혔다고 거듭 전했다.

다. 중·북 관계

● 신의주-단둥 신압록강대교 착공식(12/31)

- 북한과 중국의 최대 교역 거점인 신의주와 단둥(丹東)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착공식이 31일 오전 11시 단둥 랑터우(浪頭)에서 열렸음. 지난해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당시 양국이 건설에 합의 한 지 1년 2개월 만임.
- 착공식은 양국 고위직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공안이 행사장 주변 도로를 봉쇄, 일반인의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등 삼엄한 경비를 펼친 가운데 15분간 진행됐음.
- 총사업비 17억 위안을 들여 3년 뒤 완공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신압록강대교는 기존 압록강 철교에서 8km가량 하류에 건설돼 신의주 남부와 단둥 신도시가 들어서는 랑터우를 연결하게 됨. 랑터우에는 이미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단둥시 신청사 건립도 추진되고 있음.
- 교량 건설 예정지에 최근 세워진 안내판에는 이 다리가 신의주 남쪽에 위치한 삼교천(三橋川)의 장서(長西)와 단둥을 잇게 된다고 소개돼 있음. 또 공사 구간은 신압록강대교(3km)와 단둥과 신의주 진입도로까지 합쳐 총 12.7km라고 밝혔음.
- 이 다리가 완공되면 1911년 건설돼 노후한 탓에 20t 이상 화물차량은 통행하지 못하고 단선(單線)으로만 운행되는 기존의 압록강철교를 대체하게 돼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신의주와 단둥 간 무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2007년 초 북한을 방문한 우다웨이(武大偉) 당시 외교부 부부장을 통해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처음으로 공식 제의했으며 지난해 10월 원 부총리의 방북 때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냈음. 북한과 중국은 이어 지난 2월 단둥에서 이 다리 건설 및 관리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단둥시는 10월에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음.
- 그러나 착공 시기가 계속 늦춰지면서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지난 25일 중국 중앙정부의 긴급 지시에 따라 이날 갑작스럽게 착공식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착공식은 열렸지만 동절기인 탓에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임.
- 다리 건설과 관련 북한이 신의주 주변 도로 신설 등을 요구, 중국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고 아직도 노선 등 교량 건설을 둘러싸고 북중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완공까지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北·中, 수풍발전소 개조공사 한창(12/29)

- 북한과 중국의 공유 하천인 압록강에 세워진 수풍발전소(발전용량 약 80만kW)의 개조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보도됐음.
- 북중 양측은 28일 노후된 수풍발전소를 개조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이 발전소 보조댐 위에 건설된 교량을 폭발시켰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북중 양측은 압록강의 홍수방지 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지난 2009년 8월15일 수풍발전소의 댐들과 수문들에 대한 개조공사에 착수, 오는 2012년 완공할 계획임.
- 중국은 지난 7월말 압록강 일대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자 수풍댐을 비롯한 압록강 댐들의 방류량을 늘려 홍수피해를 최소화했으나 이 때문에 북한측은 큰 피해가 난 것으로 보도됐음.
- 북중은 지난 1944년 수풍발전소를 만들고 ‘조·중 수력발전회사’를 설립해 매년 베이징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며 이사회를 열고 생산된 전력을 절반씩 나눠 써왔으나 북한은 지난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후 전량을 사용, 평양의 전력 사정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 北·中, 내년 라진·황금평 합작개발 시작(12/29)

- 북한과 중국이 내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라선시 경제특구에 대한 합작개발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는 최근 베이징에서 라선지구의 부두,도로,정유시설을 합작 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베이징의 소식통들이 29일 밝혔음.
- 소식통들은 북한은 35억달러를 들여 5년간 추진될 이 합작개발을 위해 토지와 인력 등을 제공하고 중국 측이 자금을 투자한다고 말했음. MOU에 따르면 라선지구의 부두,도로,정유시설(승리화학) 등을 합작으로 건설하고 이어 무산철광석의 채광 시설을 현대화한다는 것임.
- 북중간 라선지구 합작개발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5월 방중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했으며, 북한은 이에 따라 지난 7월 이를 추진할 전담기구인 조선합영투자위원회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 대사 출신의 이수용을 위원장으로 한 조선합영투자위원회는 중국 상무부와 북-중합작공동위원회를 발족했다는 것임. 중국측의 위원장은 상무부 부부장이 맡고 있고, 실제 개발에는 국유에너지 기업이 참가한다고 한 업계 소식통이 말했음.
- 중국은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의 성공을 위해 동해출항권이 절대적이어서 라선시의 부두 사용 확보에 적극 나서왔고 북한은 지난 1월 특별시



로 승격한 라선시의 인민위원회 간부들을 젊고 개방적인 인사들로 대거 교체, 외자유치에 적극 나설 행보라는 관측을 낳았음.

- 중국측은 자국의 창리(創立)그룹이 확보한 라선항 부두를 통해 지난 9월 처음으로 동북3성의 곡물과 목재 등을 적재한 1t 규모의 벌크선을 출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수 년간 소문만 무성했던 훈춘~원정리~라진간 도로 포장 및 확장공사는 내년 초 착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지린(吉林) 성 정부는 2012년까지 이 4차로 도로와 대교를 새로 건설하기로 하고 북측과 협의를 끝냈음.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최대 2억5000만 위안(약 425억 원)인 사업비는 전액 지린 성이 부담함.
- 북측은 라선지구 합작개발과 동시에 내년 5월께 압록강에 있는 황금평을 임가공단지로 개발하는 합작사업에 착수함. 황금평은 단둥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랑터우(浪頭)와 철조망 하나를 두고 맞붙어 있는 11.45km² 크기의 섬이며 이 곳에는 개성공단을 모델로 한 경공업단지가 들어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中, 北 잇는 교통망 대대적 정비 추진(12/28)

- 두만강 유역에 건설되는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와 북한의 라진·청진을 잇는 북-중 광역 경제벨트 조성을 구상 중인 중국이 양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마련했음.
- 28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국 국무원이 창지투 개방 선도구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한 이후 자체 교통망 건설 세부 계획을 마련하면서 북한의 라진과 청진, 무산 등을 잇는 도로와 철도망 건설·정비 계획을 포함시켰음.
- 연변주의 대북 교통망 건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중국이 부두 사용권을 확보, 동해 진출 관문 기능을 하게 될 라진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훈춘(琿春)에서 취안허(圈河)통상구와 북한 원정리를 거쳐 라진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임. 사업비 23억 위안이 소요되는 이 고속도로는 총 길이 39km로, 54km 길이인 현재의 훈춘-라진 간 비포장도로보다 거리가 대폭 단축됨.
- 연변주는 또 1936년 건설돼 노후하고 폭도 6.6m에 불과해 차량의 교차 운행이 불가능한 현재의 취안허-원정리 간 두만강대교를 대체할 신두만강대교 건설도 추진하고 있음. 기존 다리 상류 50m 지점에 세워질 신두만강대교는 길이 577m에 왕복 4차로(폭 25m)로 건설돼 완공되면 연간 물동량이 120만t으로, 현재 수준의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됨.
- 일제시대 건설돼 노후한 투먼(圖們)-라진 구간(158.8km) 철도도 2020년까지 12억7천만 위안을 들여 대대적으로 보수, 정비할 계획임. 룡징(龍井)시 싼허(三合)통상구와 청진을 잇는 고속도로(47km.총사업비 28억 위안)와 허룽(和龍)-북한 남평-청진 간 고속도로(39km.



- 총사업비 23억 위안) 역시 2015년까지 모두 신설하겠다는 구상임.
- 중국은 지난 7월 청진항 3, 4호 부두를 15년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북한으로부터 확보했으며 투먼-북한 남양-청진으로 연결되는 기존 노후 철도(171km)도 보수하기로 북한과 합의했음. 중국은 2020년까지 20억 위안을 들여 이 철도의 보수와 정비를 마무리하기로 했음.
- 이렇게 되면 창지투 관문인 훈춘과 투먼, 싼허가 중국의 해상 통로인 라진·청진과 그물망처럼 연결돼 두만강 유역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곡물이 라진과 청진을 통해 중국 남방이나 해외로 대량 운송되는 길이 열리게 됨.
- 중국은 허룽에서 남평을 거쳐 북한 최대 철광 생산지인 무산을 잇는 철도(53.5km.총사업비 16억 위안) 신설도 추진하고 있음. 이 철도는 무산에서 생산되는 철광 등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지난해 10월 방북 당시 신의주-단둥(丹東)을 잇는 신압록강대교를 건설키로 합의, 연내 착공식을 하기로 한 데 이어 창지투 개방 선도구와 라진, 청진을 잇는 교통망이 정비되면 북-중 경제협력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 “北-中 잇는 신압록강대교 연내 착공식”(12/27)

- 북한과 중국이 지지부진했던 신의주와 단둥(丹東)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착공식을 연내에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중국 선양(瀋陽)과 단둥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 당국이 연내 신압록강대교 착공식을 하기로 결정, 준비 작업에 들어갔음.
- 단둥의 한 소식통은 “지난주 중국 중앙정부에서 해를 넘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 랴오닝(遼寧)성과 단둥시 정부가 급하게 착공식 날짜를 조정하고 있다”며 “30일이나 31일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착공식을 해도 동절기라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이나 가능하다”며 “서둘러 착공식을 하는 이유는 북한과 중국 모두 신압록강대교 건설 의지가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 선양의 한 중국 소식통도 “연내에 단둥에서 착공식이 열린다”고 확인하면서 “양국 중앙의 부장급 간부와 랴오닝성과 신의주 최고 지도부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내년 초로 예정돼 있었으나 갑자기 앞당겨졌다”며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상징적 의미”이라고 설명했다.
- 신압록강대교 건설 예정지인 단둥 랑터우(浪頭)에는 최근 신압록강대교 건설 계획을 안내하는 ‘공정건설명패(工程建設銘牌)’가 설치되고 착공식에 사용될 건설 장비도 등장했음. 이 안내판은 공사 발주 기관을 랴오닝성 교통청도로관리국으로 밝히고 신압록강대교가 신의주 남쪽에 위치한 삼교천(三橋川)의 장서(長西)와 단둥을 잇게 된다고 소개했음. 또 공사구간은 신압록강대교(3km)와 단둥과 신의주 진입도로까지 합쳐 총 12.7km로, 우선 다리를 받치는 교각을 건



설하게 된다고 밝혔음.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당시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합의했음. 이어 지난 2월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과 우하이룽(吳海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단둥에서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음.
- 단둥시 정부는 이후 신압록강대교를 지난 10월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해왔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늦춰지면서 연내 착공이 물 건너간 것으로 여겨졌음.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둘러싸고 북한이 추가 지원을 요구,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설도 흘러나왔음.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갑작스럽게 신압록강대교 착공식에 나선 것은 대외적으로 굳건한 우의를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임.

라. 일·북 관계

● 日 외상 “내년 북일 대화 재개 추진” <日紙>(12/29)

-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이 북일간 대화를 재개하고자 내년에 실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9일 보도했음.
- 마에하라 외상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최근 2년간 중단된 북한과의 공식 대화에 대해 “국교가 없어도, 확실히 양국 간에 현안사항에 대해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개 의욕을 보였음. 일본은 북일간 대화를 통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나 북일 국교 정상화 등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마에하라 외상은 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여러가지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실무자에 의한 공식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북한은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일본 총리가 방북했을 때 일본인 납치 사실을 시인했고, 이후 7명을 돌려보냈음. 하지만 일본은 12명의 추가 소재 파악과 귀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국간 대화는 2008년 8월 선양(瀋陽) 실무 협의에서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에 합의한 이후 단절됐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전국 일간지, 한미 FTA 조기비준 촉구(12/28)

- 미국의 전국 일간지인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신속하게 비준할 가치가 있다며 미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음.
- 이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최근 한미 양국간에 타결된 FTA는 친(親)노조 노선을 견지하는 민주당 정부에 의해 협상이 진행됐고, 특히



미 최대 노조조직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과 전미철강노조(USW)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지지하고 나선 만큼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비준함으로써 발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실은 한미 FTA는 향후 5년내에 공산품과 소비재에 부과되는 관세의 95%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출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미국의 통신, 첨단기술, 제약, 농업, 금융업계가 한국 시장에 접근하고 진출하는데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 사실은 이어 활기차고,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한국은 호전적이며, 기괴한 북한 정권의 야욕을 견제할 수 있는 억제책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적 측면 외에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한미 FTA를 비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과거 몇년새 북한에 유화적 태도를 보였던 한국은 최근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북한을 재평가하고 있다면서 한미간 군사, 외교적 우호관계를 보완해주는 견고한 경제적 연대는 북한에 대한 보다 공고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사실은 또 한미간 추가 협상 과정에 미 자동차 노조가 참여하고 양보까지 얻어냄으로써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시장에 더 많이 수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반면, 현재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을 제한할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의 최대 자동차 업체인 현대와 기아차는 현재 미국에 공장들을 건설중인 만큼 이들 업체로부터의 차량 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란 점을 조기 비준의 근거로 들었음.
- 마지막으로 한미 FTA가 과도한 부채에 허덕이는 미국경제가 투자와 저축에 관심을 돌리고, 아시아와 중남미의 신흥국가들과의 무역이 경계 대상이 아니라 장려의 대상으로 시각을 전환할 수 있는 전조가 될 수 있다면서 한미 FTA 비준이 내년 미 상원의 최우선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USA 투데이는 물론 사실 밑에 AFL-CIO의 재정 책임자인 엘리자베스 쉐러가 쓴 “적절치 못한 시기에 진행된 잘못된 협상”이란 제목의 반론도 함께 게재했다.

● “미·중 정상회담前 美고위급 방한할 듯”(12/27)

- 미국이 다음달 중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고위급 인사를 한국에 보낼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달 중순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던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내달초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의 핵심소식통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간 정세대응 방안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고위인사가 방한할 것으로 안



- 다”며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사전정지와 조건 등에 관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6자회담 재개조건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 활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 확약 등 3~4개 조건을 놓고 관련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IAEA 사찰범위 및 성격 등 사전조치에 대해 미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는 IAEA 사찰에 앞서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중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요구조건을 유지하면서도 관련국간 협의에 따라서는 일부 핵프로그램이 가동되더라도 IAEA 사찰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소식통은 “IAEA 사찰에 앞서 북한이 모든 핵개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게 우리의 요구조건”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에 대해서는 가동을 중단하면서도 우라늄 농축 공장은 기존에 신고된 사항이 아니라며 가동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 경우 5자간 협의에 따라서는 일부 핵프로그램이 가동되더라도 IAEA 사찰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그러나 “사찰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고 사찰단의 활동이 투어리스트(tourist, 여행객)에 그치는 수준이라면 의미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IAEA 사찰단이 장기간 상주하면서 완전한 범위 내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북한이 가동중이라고 밝힌 새 우라늄 농축공장은 북한이 기존에 신고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당연히 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 한·중 관계

● 中 “남북, 대화통해 문제해결해야”(12/30)

- 중국의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중국은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장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29일 ‘6자회담을 통한 핵폐기’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화와 협상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은 북핵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효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유관국과 더불어 6자회담 진전과 더불어 9.19 공동성명의 각 항목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장 대변인은 이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다음달 19일 방미 의제가 뭐냐는 물음에 “미국은 동북아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국



가”라며 “미국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공헌을 하기 바란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음.

- 아울러 빌 리처드슨 미 뉴멕시코 주지사의 평양 방문에서 나온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의 방문 허용이 일회성 방문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 “북한 입장은 북한에 물어봐야 한다”고 대응했음.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할 얘기는 어떤 국가도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국제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음.
- 한편, 장 대변인은 중국이 내년에도 희토류 수출을 감축한다고 밝혀 문제가 일고 있다는 질문에 “중국 정부의 희토류 개발, 생산관리 강화는 환경과 수요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한다”며 “다른 희토류 보유국가들도 적극적인 개발과 공급 의무를 져야 하고 선진기술을 가진 국가들은 관련 기술을 중국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국자 “中인민일보 보도 사실과 달라”(12/30)

- 정부 당국자는 30일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음.
- 이 당국자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인민일보 보도와 같이 ‘통일원년’이 거론된 적도 없고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어제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직접 분명히 밝혔다”면서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추구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음.
- 그는 “인민일보 보도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팩트에 기반을 둔 것인데 다 국내외 언론매체의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인민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우리 정부가 “내년을 통일 원년으로 지정했다”며 이는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잘못된 신호라고 비판했음. 통일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통일준비 공론화 및 인적자원을 양성하겠다고면서 2011년을 ‘통일에 더욱 다가서는 전진의 해’라고 규정했음.

● 인민일보 “韓 ‘내년 통일원년’..잘못된 신호”(12/30)

-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30일 우리 정부가 “내년을 통일 원년으로 지정했다”며 이는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잘못된 신호라고 비판했음. 공산당을 대변하는 인민일보의 이런 비판은 사실상 중국 당정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여 주목됨.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내년이 ‘통일에 더욱 다가서는 전진의 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인민일보의 비판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인민일보는 먼저 “한국 통일부가 오랫동안 고심해오던 한반도 통일 방안을 공개했다”고 운을 띄우면서 “2011년을 통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원년으로 정했는데 ‘원년(元年)’이라는 단어가 유독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분단 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 단결의 원칙과 1988년 ‘7.7 선언’의 북한은 대치의 대상이 아닌 선의의 동반자 원칙,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통해 화해, 평화, 협력의 과정을 거쳐오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전임 노무현 정부의 대북 온건정책을 버리고 한꺼번에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전략을 펴왔다”고 부연했음.
- 인민일보는 그런 가운데 “내년을 통일원년으로 한다는 통일부의 방침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닌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라며, 이를 두고 한국의 한 유력매체는 “그간의 안정과 협력 교류에서 흡수통일로 그 전략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전했다.
- 인민일보는 “통일은 멀지 않았다”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에서 흡수통일론이 나오는 배경을 제시했음. 우선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인도 또는 러시아와 비슷한 세계 13위로 성장한데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 후 자신감이 부쩍 커졌고 올해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으면서 흡수통일을 할 경제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도 통일을 맞기 위해 경제적인 실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소개했음.
- 아울러 “한국에서 근래 북한 붕괴론이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기회라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흡수통일 전략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권 회수 연기,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 지연, 황해(서해)로의 미 항공모함 진입을 통한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을 보면 그런 면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인민일보는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제포럼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흡수통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는 흡수통일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15일 통일세 징수 제안을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인민일보는 그러나 “현재 국제 환경과 정세로 볼 때 한국의 흡수통일 전략은 현실적인 기반도 없을 뿐더러 일방적인 계획”이라며 “과거에도 서방과 한국이 여러 차례 북한 붕괴를 전제로 노름을 했지만 결과는 대나무로 물을 푸는 것처럼 헛된 노력을 한(竹籃子打水一場空) 꼴이 됐던 것은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인민일보는 그러면서 “관심을 가질만한 대목은 한국의 통일원년 주장으로 한반도 정세가 더욱 긴장국면으로 치달고 동북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라며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방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음.



- 한편, 인민일보는 이와는 별도의 기사로 이 대통령이 일부 정부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내년에 북한의 핵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하며, 남북이 또한 협상을 통해 핵폐기하는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외교부 “中선원 객관적 조사결과 따라 송환”(12/27)

-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27일 중국 어선 선원들의 석방을 놓고 저자세 외교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관계당국의 객관적 조사결과에 따라 송환됐다”고 밝혔다.
-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 선원들에 대한 조사는 해경에서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그런 조사결과에 따라 송환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 대변인은 이어 “원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은 우리의 정선명령을 어기고 우리 해경에 상해를 입힌 뒤 도주했다”며 “지금 중국으로 송환된 선원들은 그 같은 불법행위를 하고 도주한 선박의 선원들 아니라 한중간 잠정조치수역에서 우리 해경 선박과 충돌해 구조돼서 우리가 보호한 선원들”이라고 말했다.
- 그는 “한중간 어업문제와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안정적인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집행해나간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中, 韓 연말 군사훈련에도 우려 표시(12/27)

- 중국 언론이 한국군의 연말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7일 인터넷사이트인 인민망에서 한국이 연말인 27~31일 23곳의 해상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 인민일보는 지난달 23일 연평 포격사건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한국군 단독으로 3차례 훈련이 있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9주년 좌담회에서 북한 군인들의 연평도 ‘포격 순간’ 증언을 방송했다는 내용을 곁들였다.
- 관영 신화통신도 신화망에 한국 내에서 벌어진 군사훈련 반대 시위 사진을 게재하면서 한국군이 연말에 다시 해상사격훈련에 돌입한다고 보도했다. 훈련은 동부와 서부, 남부 해역 23곳에서 계획돼 있으나 북방한계선(NNL) 부근 해역은 이번 훈련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 신화통신은 이어 연평 포격사건 이후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평도 및 포천 군사훈련 등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도 신화통신의 관련 기사를



- 그대로 게재했음. 신정보와 충칭만보(重慶晚報) 등도 한국이 다시 해상사격연습을 하려 한다며 우려감을 표시했음.
- 이들 신문은 이와 더불어 24일 한국 외교안보연구원이 내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고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조지 워싱턴호 이외에 미 항모인 칼 빈슨호가 다음 주 서태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은 '북한식 성전'을 다짐하고 있어 위기감은 여전하다고 언급했음.
 -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는 26일 격렬비열도 북방, 안마도 남서방, 미여도 근해, 흑산도 남서방 등의 서해와 거진 동방, 포항 동북방, 울릉도 근해 등의 동해, 육지도 남동방, 서귀포 근해, 거제도 남동방 등의 남해에서 27일부터 31일까지 사격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음.

다. 미·중 관계

● <美中, 6자회담보다 남북대화 우선 합의?>(12/29)

-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정세안정을 위해 6자 회담보다 남북 대화를 우선하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보도했음.
- 신문은 워싱턴발 기사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중국이 6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남북대화 실현이 우선돼야 한다는데 미국과 중국이 대체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신문은 이어 이 고위 관계자는 “6자회담 재개보다 남북 대화가 우선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는 한국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데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신문은 또 이달 20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친 한국의 군사훈련에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요청을 받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해 중국이 북한의 군사대응을 억제했다는 견해를 시사했음.
- 신문은 북한 문제와 관련 중국이 최근 미국에 협조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겼다고 전했다.

● 中양제츠 외교부장, 내달 3~7일 방미(12/28)

-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이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중국 정부가 밝혔음.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양 부장의 방미는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미에 따른 의제 조율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

- 장 대변인은 “후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양국관계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만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 그는 아울러 미국의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 이외에 레이진, 칼 빈슨 항모 등이 서태평양으로 이동해와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그러면서도 “대립 대신에 대화를, 전쟁 대신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관련국가들의 공통 이익이자 각국 인민의 공통적인 바람”이라며 “중국은 유관국이 책임있는 태도로 국가간 상호신뢰를 증진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해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장 대변인은 또 중국이 항모를 건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중국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편다는 것”이라며 “중국의 발전은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그는 한중 관계와 관련, “중국은 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올해는 중국 방문의 해이고 상하이(上海)엑스포가 열린 해여서 양국간에 왕래도 빈번했고 실무적 협조도 긴밀했다”면서 “양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동반자로서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영관급 장교를 간첩혐의로 1년여 구금했다가 석방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관련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피했음.

● 신화통신 “중미 군사관계, 회복국면”(12/28)

- 중국과 미국간 경색됐던 군사관계가 회복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8일 보도했음. 신화통신은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중국 국방부가 27일 밝혔다고 전하면서 이를 계기로 미중 군사관계가 냉랭에서 온난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 중국 국방부는 게이츠 장관이 방중기간에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과 회담을 갖고 지역 및 국제안보, 양국군의 공동 관심사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게이츠 장관의 방중 계획은 여러차례 보도됐으나 중국 국방부가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지난 1월 미국이 대만에 64억달러 어치의 무기를 판매한데 중국이 크게 반발하면서 당시 예정됐던 게이츠 장관의 방중과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의 방미, 미중 양국 군함의 상호방문 등의 교류 계획이 무산됐었음.



- 게이츠 장관의 이번 방중은 지난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 부장의 초청을 게이츠 장관이 받아들여 이뤄졌음. 게이츠 장관의 내달 방중할 즈음에 천 참모장의 방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미중 양국은 국방분야 최고위층의 상호방문을 통해 같은 달 19일로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방미 전에 안보 분야의 의제에 대해 사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됨.
 - 주평(朱鋒)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센터 부주임은 “게이츠 장관의 방중으로 양국군 고위층간 교류와 대화가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음. 주 부주임은 아울러 “중미 간에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각종 교류의 증진은 물론 불신해소, 위기관리 체제 구축 논의, 지역 평화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중국 인민해방군 소장인 양이(楊毅) 국방대학 교수는 “대만에의 무기 판매와 미 의회의 중미 군교류 제한 법안, 미 항공모함의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진입 등이 미중 간 신뢰와 협력을 막는 장애물이었다”고 평가했음.
 - 중국 국방부 외사관공실 관계자는 “이번 중미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양국군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그간 갈등을 타협해 처리하면서 공동이익과 협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게이츠 장관은 중국 방문후 일본을 거쳐 다음달 14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
- **美 “중국과 한반도 문제 계속 협력”(12/28)**
- 미국 국무부는 27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방침을 확인했음.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중 양국이 6자회담 전 남북관계 개선 방침에 합의했다는 미 주요 언론의 보도에 대한 질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구체적 답변은 피한 채 이같이 밝혔음.
 - 그는 “중국은 북한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자신들이 한 약속을 준수하고 도발행동을 중단하며 책임있게 행동할 것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주장하도록 중국과 계속 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우리는 중국의 특별한 역할을 인정한다”면서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는 또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 이후 이뤄진 국무부에 대한 방북결과 설명과 관련, “그는 많은 정보(knowledge)를 가져왔고, 우리는 그의 견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하지만 그는 “우리의 정책은 똑같다”면서 “그(리처드슨)와 같은 전문성과 지식을 갖고 있는 개인들의 (우리에게 주는) 조언을 환영한다”고 언급, 리처드슨의 방북결과 제공에 대한 호의적 언급이 원칙적인 언급임을 시사했음. 그는 또 리처드슨의 방북이 “사적인 방문”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면서 리처드슨이 사전에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했음.

- 이 밖에 그는 한국이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좀 더 공격적이 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파트너인 한국을 지지하며, 자위를 위해 한국이 필요한 것들을 인정한다”고 밝혔음. 그는 “모든 책임은 북한의 호전적 행동에 있다”면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한국의 주권적 권리를 우리는 명백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그는 리처드슨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후임으로 인터넷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응할 것이 없다”면서 “리처드슨의 미래 계획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라. 미·일 관계

● “美日, 주일미군 일부 훈련 광 이전 합의”(1/1)

- 미국과 일본 양국이 오키나와(沖繩)현 주일미군 가테나(嘉手納) 기지의 F-15 전투기 훈련 일부를 미국령 광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1일 보도했음.
-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이 지난달 31일 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음. 주일미군의 훈련을 일본 밖으로 옮기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광으로 옮기는 훈련은 가테나 기지에 속한 주일미군 F-15 전투기 부대가 오키나와 주변에서 매일 벌이는 방공 전투훈련의 일부임.
- 양국은 그동안 후텐마(普天間)기지과 함께 오키나와 주민들로부터 소음 민원을 사온 가테나 기지 훈련을 일본 내 자위대 기지에 분산해 실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효과가 작다고 판단해 훈련 분산지에 미국령 광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설명했다. 훈련 이전 비용은 일본 측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의 헬리콥터 부대 훈련 일부를 본토로 이전해 오키나와 주민들의 기지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텐마 기지 자체를 현 밖으로 옮기라고 요구하는 오키나와 주민들이 이같은 훈련 일부 이전에 만족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 美, 日유학생 격감에 동맹 약화 우려(12/27)

- 미국에서 중국 유학생은 급증하는 반면 일본 유학생이 격감하면서 미국 정부가 미일 결속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27일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일본 유학생이 크게 감소하면서 일본 젊은층과 미국의 거리감이 커져 장기적으로 미일 관계의 약화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음.
- 이 때문에 지난 11월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수뇌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했고, 주일 미국 대사관도 일본인 유학생을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신경



을 쓰고 있음.

- 미국의 국제교육연구소(IEE)에 따르면 2009년 현재 미국의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중국 출신은 전년대비 30% 늘어난 12만 7천60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인도와 한국이 잇고 있음. 하지만 일본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2만4천800명에 불과함. 2001년 4만7천 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임.
- 미 대사관은 지난 11월 도쿄에서 제1회 주일 미국 대사배 고교 영어 응변대회를 여는 등 일본 학생들의 미국 유학을 촉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음. 일본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유학생이 크게 줄고 있음.

마. 중·일 관계

● 日총리, 내년 봄 첫 중국 방문 검토(12/31)

- 일본 정부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내년 봄 중국을 방문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30일 밝혔음.
- 이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지난 9월 센카쿠제도(尖閣諸島 중국명 釣魚島) 근해에서 발생한 중국어선 충돌사건으로 악화한 중-일 관계를 조기에 회복할 목적으로 간 총리의 방중을 2011년 봄에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전했다.
- 간 총리의 중국 방문이 성사되면 현직 총리로는 2009년 10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당시 총리 방중 이래 1년여 만임. 일본 정부는 간 총리가 방중할 경우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호혜관계'를 재차 확인할 방침임.
- 일본 정부는 간 총리의 방중이 성사되도록 하기 위해 중국 측과 다양한 대화를 통해 환경 조성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며 총리에 앞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의 방중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측이 일본의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에 중국의 군사동향을 '우려 사항'으로 명기하는데 반발하고 있어 간 총리의 방중 실현까지는 난항도 예상된다.

바. 중·러 관계

● 中-러시아, '남북대화 촉구' 합의(12/29)

-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간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음.
- 신화통신은 러시아를 방문중인 중국의 청궈핑(程國平) 외교부 부장 조리(차관보)가 28일 러시아의 알렉세이 보로다코프 외무부 차관과 회담후 성명을 통해 "양국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긴장조성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 중국과 러시아의 남북대화 촉구는 연평 포격사건으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유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북핵 6자



- 회담을 조기에 재개할 분위기 조성에 나선 시도로 보여 주목됨.
- 청 부장조리와 보로다프킨 차관은 “현재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의 어느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북한과 한국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 양측은 그러면서 “이런 긴장 고조로 인해 자칫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긴장고조보다는 긴장완화를, 대치보다는 대화를,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하며 다시는 한반도 전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긴장 지속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양측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향후 한반도 문제에서 협력과 조화를 더욱 지속, 강화하고 남북한이 조기에 대화를 열도록 촉구하면서 유관 각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하도록 호소해가겠다”고 다짐했음.
 - 양측은 아울러 “북핵 6자회담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음.

사. 일·러 관계

● 러시아 각료 내년초 대거 쿠릴열도 방문(12/28)

- 국방장관을 비롯한 복수의 러시아 각료가 내년초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일본 명칭은 ‘북방영토’)를 방문한다고 일본언론이 타스통신을 인용해 28일 보도했음.
- 타스통신에 따르면 아나톨리 E.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을 비롯해 교통장관, 지역개발장관, 교육·과학장관 등 복수의 각료들이 내년초 쿠릴열도를 방문하기로 했음. 이들은 대통령의 지시로 쿠릴열도를 방문해 각종 개발·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됨. 지난 11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방문에 이어 다시 러시아 각료들이 쿠릴열도를 찾을 경우 일본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TV인터뷰에서 “쿠릴열도는 러시아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쿠릴열도 주민들이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아. 기 타

● 정부 ‘한반도 평화통일’ 국제적 공감대 형성 주력(12/29)

- 정부는 29일 내년에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반도 주변 4강(強)과의 협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음.
-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음. 이는 권력세습 과정에서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심화로 북한 내·외부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



다는 상황진단 하에 통일에 대비하는 중장기적 외교적 검토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됨.

- 외교부는 이번 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요국들을 상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올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3대 공동체 통일방안(평화·경제·민족공동체)과 북한을 궁극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적극 설명할 방침임.
-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한반도의 궁극적 통일에 대비하는 모든 것들을 주요국들과 협의하고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당초 업무보고 초안에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최근 흡수통일론을 둘러싼 국내외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해 ‘평화통일’이라는 용어를 명시했음.
- 외교부는 또 이번 보고내용에서는 제외했으나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법적 또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독일 통일과정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모든 통일방안을 상정, 검토하는 한편 국제기구의 승인과 국제법적 권리·의무관계를 중점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우방국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임.
-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전 여건조성을 통한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그랜드바겐(일괄타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한·미·일·중·러 5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 외교부는 또 세계 4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음.
- 이와 함께 내년 대외정책의 중심기조를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로 정하고 우선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을 심화해나가기로 했음. 이에 따라 연내 정상방문을 비롯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동맹재조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임.
- 대중관계 강화와 관련해 외교부는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확대 등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인적 네트워크 확충 ▲한·중 우호협회 등 대중 연구·교류 및 총괄조직과 중국전략연구팀 설립 등 대중 외교인프라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음.
- 외교부는 일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등 연내 정상국민 방문과 과거사 현안의 진전과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확대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철도·에너지·녹색 등 3대 신(新)실크로드 비전 실현과 고위급 협의채널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음.
- 외교부는 이와 함께 ‘대(對) 신흥국·개도국 외교’ 강화 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의 최대 회의인 제4차 부산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를 내년 11월말 국내에서 개최하고 개발협력규범 구축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임.

- 외교부는 올해 특채파동에 따른 인사·조직 쇄신을 위해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를 정립해나가기로 하고 개방적 조직문화 구축과 함께 능력있는 외부인사를 적극 영입하겠다고 밝혔음. 또 우수인력의 신흥시장 지역배치와 함께 21세기 정예 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한 외교아카데미 설립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기로 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